

정책참고자료

2018-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4
-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완료 -	
2 국민권익위원회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8
-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분석..	
70% 이상이 '자전거 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요구 -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11
-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4 교육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 당부	13
-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16
- 과학기술유공자와 국내 과학기술인이 소통·교감하는 시간 가져 -	
6 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21
-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3개 부문 유공자 선정 및 포상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복지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사회적 농업'	23
- '사회적 농업 협의체' 발족, 시범사업 조직과 전문가 간 협의체계 구축 -	

8	환경부	
	동물 찾길 사고 방지에 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마련 -	25
9	고용노동부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대폭 확대 -	31
10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및 제3기 위촉식 개최 -	36
11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 2021년까지 500여억 원 투입 산학연 공동 실증연구... 관련 제도 정비 병행 -	39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전개	
	- 유관기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28~6.5) 운영 -	43

1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80개 재난 안전사업(총 예산 규모 약 10.5조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효과가 우수한지, 국민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그 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결과 >

피해유형	부처	사업명
가뭄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동축산물 검역검사
감염병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장산재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불	산림청	산림헬기 운영
식품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재난·사고 예방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전기·가스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풍수해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
	해양수산부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 피해유형 및 부처별 가나다 순

- 재난안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였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다른 정부사업들과 함께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들을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존에는 재난안전사업과 일반재정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평가

- 특히 올해에는 재난안전사업을 풍수해, 도로교통재난·사고, 산업재해 등 42개 피해유형으로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피해유형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고유의 평가체계를 구축한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 또한 부처별이 아니라 피해유형별로 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 '19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중앙부처의 국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피해유형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해당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우수 재난안전사업(10개)		
피해유형/사업명	주요내용 및 '17년 성과	담당자
가뭄 수리시설 개보수 (농식품부/ 5,043억)	○ (개요)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기능회복 ○ 성과 - 저수지 17,310개소 전수조사·점검 → 317개소 보수보강 추진(139개소 완료) - 저수지 236만㎡ 준설 및 용·배수로 392km 보수로 가뭄피해 예방 * 축구장 66개 규모(수심 5m 기준) - 포항지진 이후 지진취약 53개 저수지 내진보강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기반과 이재천 사무관 (044-201-1860)
가축및수 산생물전 염병 동축산물 검역검사 (농식품부/ 80억)	○ (개요) 수입개방 전 수입위험평가, 공항·항만 위해 휴대축산물 검색, 상업용 동물·축산물 검역 ○ 성과 - 정밀검사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정확도 100% 기록 * 국제공인 인증 : '14년 5종 → '15년 9종 → '16년 13종 → '17년 14종 - TV 광고, KTX 객실 내 광고로 해외여행객의 반입제한 품목 자진신고 유도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 검역과 이병권 서기관 (054-912-0417)
감염병 국가예방 접종실시 (복지부/ 3,143억)	○ (개요) 12세 이하 어린이(17종), 노인(2종) 및 고위험군(2종) 대상 국가예방 접종 지원 등 ○ 성과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16년 6~11개월(32만명)에서 '17년 6~59개월(219만명)로 확대 - 예방접종대상자(부모) 및 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예방접종을 제고 - 일부 예방접종 백신 거부사례(안아키 사태)에 홍보·교육 등 적극적 대응	보건 복지부 예방접종 관리과 유정희 연구관 (043-719-6831)
사업장산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용부/ 647억)	○ (개요) 50인 미만 사업장 및 20억 미만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소요비용 일부(50~70%) 보조 * 안전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컨설팅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 ○ 성과 - '16년 개선 사업장 기준, 개선 전('15년) 재해자수 704명 → 개선 후('17년) 445명(△259명, 36.8% 감소) * (참고) 미지원 사업장 재해자 감소율 : 5.3%('15년) → 4.2%('16년) - 가격검증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23억) 및 수혜사업장 확대(226개소) * '17년 지원사업장 6,181개소	고용 노동부 산업 안전과 피해근 사무관 (044-202-7723)
산불 산림헬기 운영 (산림청/ 749억)	○ (개요) 산림헬기 45대 및 격납고 12개소 운영 ○ 성과 - 산불출동 골든타임(출동지시부터 현장도착까지 30분 이내) 달성률 89.5%('16년 83%) * '17년 산불출동 560회, 투입대수 1,613대 * '16년 산불출동 292회, 투입대수 634대 - 항공방제 44,752ha,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운반 331톤, 자재운반 954톤 등 - 산불 단속을 위한 헬기 공중순찰 및 계도방송(46회)	산림청 항공 지원과 장화성 사무관 (033-769-6017)
식품사고	○ (개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	식약처

피해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및 '17년 성과	담당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394억)	○ 성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 어린이 32만명 증가 * '16년 85만명 → '17년 117만명 * 급식관리지원센터 '16년 207개소 → '17년 215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강화 * 법령 위반율 : '14년 0.07 → '16년 0.04 → '17년 0.03%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17.5.30)	식생활 영양안전 정책과 최규호 사무관 (043-719-2275)
재난·사고 예방 국가안전 대진단 및 정부합동 점검단운영 (행안부/ 8억)	○ (개요)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합동점검, 안전신문고 운영 등 ○ 성과 - 시설물·건축물 등 361,445개소 점검 → 현장 시정조치 6,791개소, 보수·보강 등 대상 발굴 14,533개소, 행정처분 2,581개소 등 - 안전신문고 신고 226,919건 → 개선완료 203,357건(90.4%) * 안전신고(건) 추세 : ('15년) 74,123 → ('16년) 152,768 → ('17년) 226,919 - 정부합동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15회 실시 * 사고확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 실시(지하철, 댐, 유원시설 등) * 포항 지진 관련 긴급점검(11월),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점검(12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점검 실시	행정 안전부 안전 점검과 허인수 사무관 (044-205-4242)
전기가스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94억)	○ (개요)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 취약시설 개선사업*, 사회소외계층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 * 영유아보육시설('07~'12) → 쪽방촌('13~'15) → 지역아동센터('15~'19) ○ 성과 - 사용전 933,837호 및 사용중 8,493,218호 점검 * 대상 : 전압 600V 이하 또는 용량 75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 (사용전 점검) 점검대상 최초 전기공급 전 / (사용후 점검) 전기사업법에 따라 1~3년 주기 실시, 특히 20kW 미만 숙박업·노래연습장업 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매년 실시 *** 전기화재 인명피해자수(명) '16년 328명 → '17년 217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 대상 긴급출동 무료 응급조치(전기안전 119) 65,831건 실시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손성동 사무관 (044-203-5133)
풍수해 지방하천 정비 (국토부/ 5,787억)	○ (개요) 지방하천 26,789km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및 하천공간 개선 ○ 성과 - 16개 시도 398개 사업 추진(65개 준공)하여 314km 안전제방 확보 및 350여개 구간 환경정비 * (참고) 지방하천 정비율 48.6% / 국가하천 정비율 80.7% - 하천 드론 측량* 시범사업(한강, 낙동강 등 하천 122.5km) 실시하여 측량 소요기간 및 비용 절감 * 항공측량 대비, 사진 해상도 4배, 비용 1/2, 소요기간 1/10	국토 교통부 하천 계획과 김재환 사무관 (044-201-3616)
풍수해 국가해양 관측망 구축 및 운영 (해수부/ 304억)	○ (개요) 해양현상 관측시설 131개소를 운영·관리, 각종 해양정보 수집, 실시간 제공 및 유용한 정보로 가공 ○ 성과 -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 해운대(17.7.31.), 제주 중문(17.8.23.)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발생 시 '위험(대피)' 지수 표출 및 대비강화를 통한 신속 구조(각 70명, 15명) - 해양활동(레저, 선박운항 등)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석·조류 정보, 생활해양예보지수, 선박운항지수 등	해양 수산부 해양 관측과 김희순 서기관 (051-400-4210)

2

국민권익위원회

“도로 위 역주행하는 자전거 좀 단속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분석..
70% 이상이 ‘자전거 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요구 -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의 71.1%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26건('16년 1월~'17년 12월)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8.7%)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44.7%)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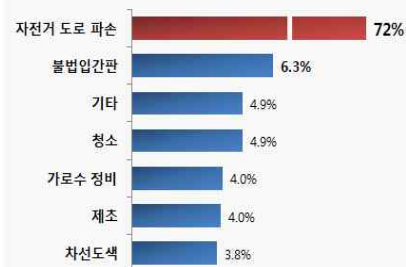
실제로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길이는 21,179km로 '09년 대비 약 85%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설치 요구보다는 기존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의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도로 함몰, 침하, 균열 및 맨홀 파손 등에 대한 요구가 72%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및 개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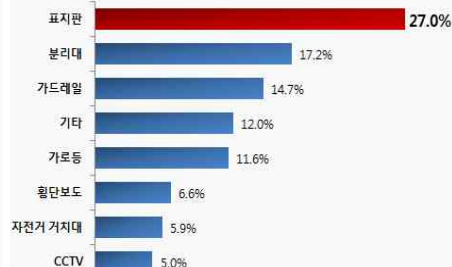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7.3%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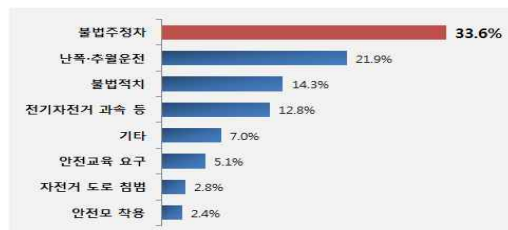
< 안전시설 설치·개선을 요구하는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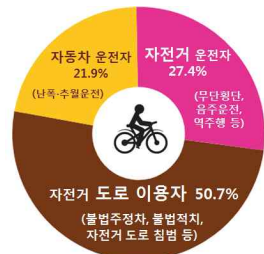
- 그 밖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내 불법주정차 등 '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19.1%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불법적치 등 자전거 주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이르러, 일반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자전거 사고 중 84.9%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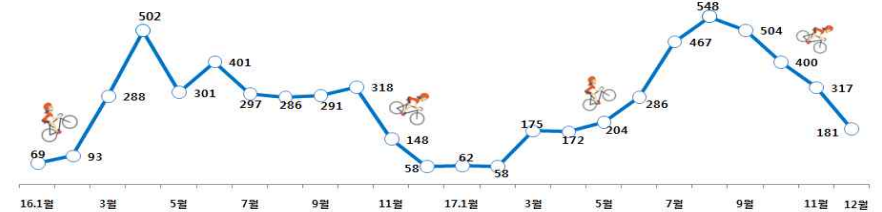
< 안전의식 주체별 유형 >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신청지역별로는 경기도 29.7% (1,906건), 서울이 16.8% (1,078건)로 많고, 세종이 0.6% (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대비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 : 대전(50%) > 세종(45%) > 울산(43%) > 서울(42%) > 경기(37%) ('16년, 한국교통연구원)

<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 >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민원분석 자료와 함께 관계기관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5월 23일 조달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필요) 이를 추진하여야 함(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

-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당초 계획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18~'22년)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추가 조성**('05~'17년 실적, 640억원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원 한도, 50억원)

- 추경을 활용하여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기업당 1억원 한도, 100억원)

- ②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리고(1.2조원, 16.4%)**,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도 개최한다**('18년 하반기부터 월1회)

- ③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운용**하고(기보, 5,000억원),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 ⑤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 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한다.

* 사업신청시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금지, 평가 시 여성차별적 질문(결혼여부 등) 금지 등

< 주요 신설 또는 강화지원 방안 >

-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원) 및 여성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정) 등 신설
-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추가 조성('18년 100억원, '19~'22년 매년 200억원)
- 여성전용 R&D 100억원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금융·수출 지원 우대
- 여성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3년간 청년지원금(자산형성) 1,08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정)
-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5,000억원 기보, 보증료·보증비용 등 우대)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 신설(아임쇼핑 협업)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8.5조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1.2조원, 16.4% 증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협력 당부

-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3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기업 관계자(5개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참석 기업: 대우루컴즈, 우원엠앤이, 위더스코리아, 에이스메디칼, 씨에치씨랩

□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초과수요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 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한 고졸졸업자도 이후에 대학 진학 등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우선, 교육부는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기업 관계자들은 고졸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소

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음으로, 교육부는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지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 특히, 후학습 기회 제공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므로, 기업이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기업 관계자들은 후학습 지원을 통해 기업과 소속직원이 함께 발전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였다.
-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청년일자리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으며,
- 이를 구체화하고 한층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는 교육계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범사회적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 “오늘 간담회와 같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한발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요

붙임1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요

□ 개요

- 목 적 :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 일 시 : '18. 5. 23.(수) 10:00~11: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
 - 참 석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업교육정책관, 평생미래교육국장 등
 - (기업 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기업 관계자(5개사) 등
- ※ 참석 기업: 대우루컴즈, 우원엠앤이, 위더스코리아, 에이스메디칼, 씨에치씨랩

□ 간담회 일정(안)

세부일정		내 용
10:00~10:05	05'	○ 기념촬영
10:05~10:10	05'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모두발언
10:10~11:30	80'	○ 간담회 - 고졸 일자리 환경 개선 - 후학습 지원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 선취업-후학습 정책 방향

5 과학정보통신기술부

과기정통부,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과학기술유공자와 국내 과학기술인이 소통·교감하는 시간 가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4일(월) 오후 웨스턴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세종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했다.
- 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이해 과학기술유공자를 격려하고, 과학기술유공자와 국내 과학기술인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 과학기술유공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정부가 지정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6년말에 관련 법령이 처음으로 제정·시행되었다.
 -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 32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선정한 바 있다.
 - ※ 32명의 과학기술유공자 중 생존한 유공자 10명, 작고한 유공자 22명
- 이번 행사에서는 후배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한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영숙 박사와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과학기술유공자 업적에 대한 헌정강연에 나섰고,
 - 박원훈 전 KIST 원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다짐에 대해 공유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이와 함께 과학기술유공자, 헌정·특별강연자 및 행사에 참석한 젊은 과학기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과기유공자 예우·지원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공자 예우·지원을 강화하고, 과기인들의 공적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5개년(17~21년) 계획’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를 주요행사에 초청·의전, 과학기술유공자 정례회 운영 지원 및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편의를 제공**하고
- 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유공자의 정년연장 우대, 유공자의 저술활동 지원 등 **활동 지원**과 함께
- 명예의 전당 조성, 공훈록 제작·배포 등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하여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올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은 법령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경에 지정계획 수립한 후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참고 1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목적) 과기유공자를 격려하고, 유공자와 국내 과학기술인이 소통·교감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인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장
- 일시/장소 : ‘18. 5. 14(월) 14:00~ / 웨스트조선호텔(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 참석 : **과기유공자·유족**, 유공자 연관 중견 과학기술인(50~60대), 젊은 과학기술인(40~50대) 및 **박사·박사 후 과정 이공계 인재 등 300명**

□ 행사이미

- 과학의 날 행사 시 **과기유공자 증서 수여**, 과학의 달 특집 **KBS 열린음악회**와 함께 과기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행사
 - 과기유공자의 연구분야(학파)를 중심으로 R&D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지속성 유지
- 석·박사과정 학생, 젊은 과기인, 중견 과기인 및 유공자가 **세대를 뛰어 넘는 소통의 장** ⇒ **과학기술인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공감대 형성**

□ 행사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 고
14:00~14:15	15'	▪ 인사말씀 ▪ 축 사 (축사 전 미수여 된 유공자 증서 수여)	이명철 한림원장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14:15~15:55 (1:40')	10' 30' 30' 30'	▪ 과학기술유공자 업적의 재 조명 - 소개영상 상영 - 헌정강연 · 자연분야 과기유공자 · 생명분야 과기유공자 · 엔지니어링분야 과기유공자	신성철 KAIST 총장 유영숙 KIST 책임연구원 김도연 POSTECH 총장
15:55~16:10	15'	휴식(Coffee Break)	
16:10~16:30	20'	▪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다짐 - 특별강연	박원훈 KIST (전)원장
16:30~17:10	40'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 자유토론	최장 권욱현 DGIST 석좌교수
17:10~		▪ 폐 회	

참고 2 과학기술유공자 현황 [32명]

* 성명 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공적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공적
 권이혁 (192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보건복지 행정과 보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교육행정을 정립하는데 기여	 구김동일 (1908)	서울대학교 교수	화학섬유로 산학협력을 일궈낸 교육자
 구김수지 (1942)	이화여자 대학교 명예교수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은 간호학 박사 1호	 구김순경 (1920)	템플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의 화학 연구 발전을 원격지원한 이론물리화학자
 구김재근 (192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선강국을 건설한 1세대 조선공학자	 민계식 (1942)	현대중공업 전)회장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학자
 박노희 (1944)	UCLA 교수	조국의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인 치과의학자	 구석주명 (1908)	국립과학 박물관 동물학부장	조선적 생물학을 추구한 나비 학자로, 나비 연구에 민족적 가치를 부여
 구안동혁 (1906)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닦은 화학공학자	 구염영하 (1919)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전통 범종의 신비를 규명
 구우장춘 (1898)	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종의 합성'을 처음 입증한 유전육종 학자	 윤덕용 (1940)	KAIST 명예교수	첨단 재료공학의 주춧돌을 놓은 1세대 재료공학자
 구윤일선 (189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병리학을 탄생시킨 최초의 병리학자	 윤종용 (1944)	삼성전자 전)부회장	한국을 반도체 · 통신 강국으로 견인, 국제표준과 특허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구이원철 (1896)	국립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소행성(2002 DB1)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 기상학자	 구이임학 (192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명예교수	'리군'(Ree Group) 이론으로 수학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인 수학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공적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공적
 구이재성 (192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화학공업 발전을 주도한 화학공학자로, 경제성장에 기여	 이창건 (1930)	원자력문화진흥원 원장	원자력 연구로 한국형 원전 개발을 이끈 1세대 원자력 공학자
 구이태규 (1902)	KAIST 명예교수	노벨상 후보에 오른 세계적인 이론화학자로, 화학 연구와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이호왕 (1928)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괴질을 퇴치한 한국의 파스퇴르
 구이휘수 (1935)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 초대 이론물리부장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연구로 평가받고 있음	 정길생 (1941)	건국대학교 전)총장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시한 동물생명공학자
 정창희 (192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탄광지역 지층 연구로 석탄 자원 확보에 기여한 지질학자	 구조백현 (190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 농학의 '텃밭'을 가꾼 농학자
 구조순탁 (1925)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물리이론에 이름을 올린 세계적인 통계물리 학자	 조완규 (1928)	서울대학교 전)총장	생물학과 교육행정을 발전시킨 생물 과학자로 교육·과학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헌신
 구최순달 (1931)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초대 소장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의 아버지로, 우리별 1~3호 발사 주도	 구최형섭 (1920)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초대 소장	과학기술행정의 틀을 잡은 과학행정가
 구한구동 (1908)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약학 연구·교육의 아버지로, 식생활과 위생 연구로 약학 근대화 기반을 조성	 구한만춘 (1921)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은 전기공학 박사 1호
 구허문희 (1927)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삼원교잡 육종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하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이뤄 주곡 자금을 달성	 구현신규 (191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산을 푸르게 가꾼 임목육종학자로, 국가 조림사업을 주도하고 경제성 높은 임목자원을 개발하는데 기여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3개 부문 유공자 선정 및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후보자와 후보작을 추천받는다.

10회째를 맞이한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콘텐츠 분야 시상식으로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게임 분야에 대한 정부포상이 신설되어,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3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9개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에서는 콘텐츠 수출과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공적 분야에 따라 ▲ 수출유공, ▲ 문화교류공헌, ▲ 신시장 개척, ▲ 창업신인 등 4개 세부 분야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발전 부문에서는 ▲ 게임산업과 ▲ 게임문화 등 2개 세부 분야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방송영상 부문 6월 11일까지, 해외진출과 게임 부문 6월 20일까지 후보자(작) 받아

후보자 및 후보작 추천은 콘텐츠 유관 기관, 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은 6월 11일(월)까지, 해외진출 부문과 게임산업발전 부문은 6월 20일(수)까지 추천을 받는다. 추천서는 각 부문의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도착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 유공자는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과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게임산업발전 부문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중에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복지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사회적 농업’

- ‘사회적 농업 협의체’ 발족, 시범사업 조직과 전문가 간 협의체 구축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학계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고자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에는 올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9개 조직과 농촌·복지 전문가 5인이 참여하며, 23일 시범사업 현장인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조직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마련한 사회적 농업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협의체에서는 각 사회적 농업 조직을 담당할 전담 전문가를 매칭하였고, 앞으로 상시 교류함으로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선정된 전문가들은 지정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 시범사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참여자 각자의 특성(참여 동기, 장애 정도, 농업 숙련도 등)을 고려해 체계화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사회적 농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지역 자원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의 확장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 전문가들은 각 조직에 밀착해 올해 시범사업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여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에 활용한다.

□ 협의체는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 앞으로 각 시범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협의체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9곳이지만, 향후에는 전국단위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들에 대한 멘토링·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동물 찾길 사고 방지에 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으로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마련 -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동물 찾길 사고 발생 현황(건)>

(고속국도) 2,360('12)→2,188('13) → 2,039('14) → 2,545('15) → 2,247('16) → 1,884('17)

(일반국도) 3,174('12)→7,452('13)→8,727('14)→9,563('15) → 12,867('16) → 15,43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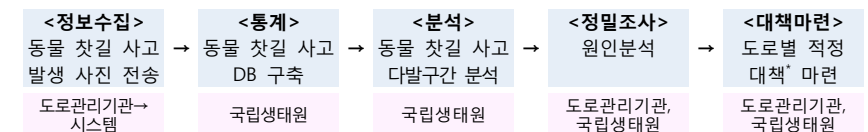
- 또한, 동물 찾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동물 찾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 이번 지침은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앱(APP)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굿로드(Good Road)'를 활용한 것으로, 앱의 관리권한 및 축적된 데이터 등을 환경부가 넘겨받아 전문 조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동물 찾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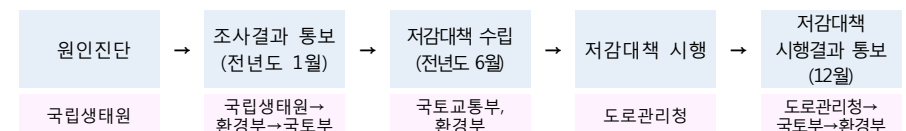
<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



*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설치 등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 찾길 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 하며, 국토교통부는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 동물 찾길 사고 감소대책 추진절차 >



- 한편,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연내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여 동물 찾길 사고 발생 통계정보는 물론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찾길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하여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찾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지침이 사람과 동물을 모두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붙임 1.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붙임 1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동물 찾길 사고 조사체계 개선

- **(조사체계 일원화)** 도로관리청(국토부), 지방환경청(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던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 전 도로구간 확대
- **(동물 찾길 사고 시스템 구축)** 수기작성 보고방식에서 위치기반 앱(APP)을 활용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동물 찾길 사고 조사 체계>
- (1단계-수집) 앱(APP)을 활용한 조사방식 간소화(조사원)
- (2단계-분석) 사고 종 확인, DB 및 통계 분석 등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국립생태원)
- (3단계-대책) 도로별 통계자료 제공, 저감대책 수립(도로기관)

- **(정밀조사·권고) 집중발생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국립생태원)를 실시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등 저감대책 수립권고

□ 동물 찾길 사고 관리체계 개선

- **(기관역할 명확화)** 국토부는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대책 수립
- **(사체 활용규정 마련)**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사체의 학술적 이용 활성화(국립생물자원관 이관)

□ 부처간 협업에 의한 동물 찾길 사고 예방·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종별, 도로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제시
- **(예방대책)** 동물 찾길 사고 집중예보제 실시, 운전자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물 찾길 사고 정보제공(내비게이션)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2.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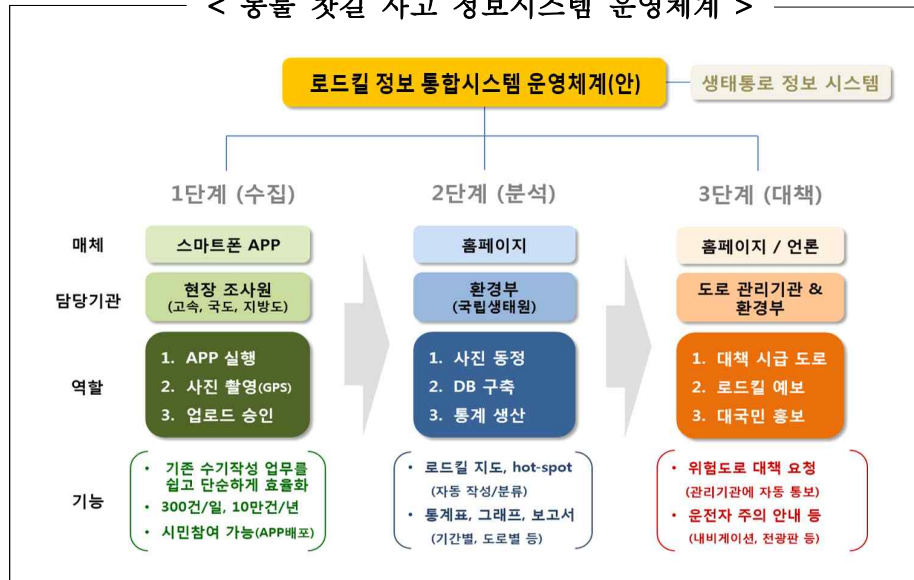
- 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시행(5.28)

붙임 2 질의응답

1.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이란?

- 스마트폰 위치기반 앱(APP)을 활용하여 촬영된 동물 찾길 사고 사진을 분석하여 지역별, 도로별, 종별 동물 찾길 사고 DB로 구축, 향후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 (1단계-수집) 조사 앱(APP)을 활용한 동물 찾길 사고 조사(조사원)
 - (2단계-분석) 사고 동물 종 확인, DB 및 통계 분석(국립생태원)
 - (3단계-대책) 도로별 통계자료 제공, 저감대책 수립(도로기관)

< 동물 찾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



2. 동물 찾길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방향은?

- 동물 찾길 사고 집중예보제 시행, 동물 찾길 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비게이션 안내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강화
 - (집중 예보제 시행)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5월, 11월*)에 언론, 도로전광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집중홍보 실시
 - * 로드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라니의 새끼가 어미로부터 독립하여 이동하는 시기
 -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물 찾길 사고 담당 기관과 업체 및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찾길 사고, 생태통로 인식증진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물 찾길 사고 정보제공 등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동물 찾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운전자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 실시

3.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조치는?

- 동물 찾길 사고 조사결과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국립생태원)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동물 찾길 사고 발생중,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안내전광판 설치 등 저감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해당 도로관리기관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다음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대폭 확대 -

□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 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은 고용센터와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 예정)

<2년형 및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18.6월~)>

구분	적립금(계)	청년	정부	기업
2년형	1,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400만원 (정부→기업 500만원)
3년형	3,000만원	6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정부→기업 750만원)

○ 한편,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

○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자세한 해지 및 환급금 규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규정할 예정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하며,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 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3월 15일 이후 **신홍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II**도 신설한다.

-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

○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개요)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개선내용) ▲대상 업종 및 규모 확대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해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

* 추경을 통해 1,487억원 추가 반영

구분	기존	개선
• 대상업종	성장유망업종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전체 업종(5인 이상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
•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 지원방식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1인당 연 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 한도	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좌동

-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 적용,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지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10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및 제3기 위촉식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다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5월 25일(금)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5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양한 출신국가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정부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자문·점검 등을 담당한다.
- 특히 이날 새롭게 위촉되는 제3기 위원은 11개국* 출신 16개 시·도의 결혼이주여성 16명으로, 과거 9개국 출신 5개 권역 10명에서 확대됐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네팔, 태국, 스리랑카

< 주요 변경사항 >

제1·2기(2015년~2017년)	제3기(2018년)
■ 5개 권역* 10인 * 서울,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 9개국	■ 16개 시·도별 1인(16인) * 세종시 제외 ■ 11개국(태국, 스리랑카 신규추가)

- 이날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출신국가별·언어별·지역별로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는데 대응하여 보다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특히, 장기 정착 비율은 높아지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여전히 겪는 사회·경제적 참여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결혼이민자에게 적합

하고 선호하는 일자리 발굴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 (구 성) 시·도에서 추천한 결혼이민자 가운데 출신국가 및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6명으로 구성('15.12월 ~)
-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네팔, 태국, 스리랑카 등 총 11개국
- (시 기) 반기별 최소 1회 가량 개최
- (역 할)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장기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정책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붙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요

□ 추진 배경

-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구성·운영

- 위원 구성 : 결혼이주자 출신국·지역 고려하여 16명 이내 위촉
 - (위 원 장) 가족정책관
 - (위 원) 결혼이민자 16명 위촉
 - (위촉방법) 대표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각 2~3명)에서 추천을 받아 지역별 위촉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간 활동 (연임 가능)

※ 주요 출신국 분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네팔	태국	스리랑카
2	2	2	2	2	1	1	1	1	1	1

- 운영 일시 : 반기별 1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주요 역할

-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토론회, 캠페인,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

- 2021년까지 500여억 원 투입 산학연 공동 실증연구...관련 제도 정비 병행 -

□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물류 등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5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와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 |
|--|
| <p>①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연구개발 개요: 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18. 4. ~ '21. 12. - 총 연구비: 370억 원(정부 280억 원, 민간 90억 원) -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주관), 에스케이(SK)텔레콤,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p>②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 개요: 화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18. 4. ~ '21. 12. - 총 연구비: 136억 원(정부 103억 원, 민간 33억 원) -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주관), 국민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
|--|

□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 등에 자율주행 기술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개인 승용차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 지금까지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중 버스는 4대에 불과하고, 화물차는 아직 허가받은 차량이 없음(현재 1대 안전성 검증 중)

- 이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첫 번째 연구개발 과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관제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하고, 실시간 통신*으로 현장 인프라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 도로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 이동통신망(LTE·5G) 등 활용

- 올해 자율주행 버스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소형 버스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연구개발 과제 "차량·사물통신(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무리지어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 이와 같은 군집주행을 통해 공기저항 감소로 인한 연비 향상 가능

○ 실시간 통신을 통해 주변 차량과 장애물 정보를 인식.공유하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류.이탈이 가능한 자율.군집주행 화물차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 올해 자율.군집주행 화물차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화물차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4대 이상의 화물차를 연계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재평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물류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 “특히 산학연이 힘을 합쳐 만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R&D 착수보고회 계획(안)

□ 일시 : '18. 5. 25.(금) 13:30~15:30

□ 장소 : 서울 양재 엘타워 지하1층 '골드'홀

□ 참석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등

○ (버스R&D) 교통연구원 강경표 연구단장,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등

○ (트럭R&D) 도로공사 손영호 연구단장, 국민대학교 박기홍 교수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05'	일정 및 내빈 소개	진홍원
13:35~13:45	10'	인 사 말 씀	
13:45~13:50	5'	'대중교통시스템' 총괄 발표	강경표 연구단장 (교통연)
13:50~14:00	10'	'대중교통시스템' 1세부 발표	이경수 교수 (서울대)
14:00~14:10	10'	'대중교통시스템' 2세부 발표	서정석 매니저 (SKT)
14:10~14:20	10'	'대중교통시스템' 3세부 발표	탁세현 부연구위원 (교통연)
14:20~14:35	15'	'군집주행' 총괄 및 2세부 발표	손영호 연구단장 (도 공)
14:35~14:45	10'	군집주행 1세부 발표	박기홍 교수 (국민대)
14:45~15:25	40'	질 의 응 답	
15:25~15:30	05'	폐 회	

해수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전개****- 유관기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주간(5.28~6.5)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연안 160여개소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 2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매년 7~8만 톤 가량을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그물 등 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것을 말함

해양쓰레기는 일단 바다로 유입되면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15,000km에 이르는 전국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전체량을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육상기인(67%) 쓰레기가 해상기인(33%)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다로 모여들기 전 육상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유입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분석된다.

*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추정결과(2013.12)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일제 정화주간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섬 지역이나 민간인의 출입이 어려운 군작전 지역 등 평소 상대적으로 수거 활동이 소홀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군부대, 민간 전문 잠수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활동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정하여 해양정화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아이디어·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바다환경 보호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한 번 들어가면 빠르게 확산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5.28일 부터 전국에서 진행되는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추진배경

- 제23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주간을 운영,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운영계획

- (주관/기간) 해양수산부 / '18.5.28(월)~6.5(화)
- (참여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추진내용) 해수부(지방청)와 지자체에서 공동주관하여, 정화주간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전개
 - 유관부처, 수협 등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NGO, 지역주민·학생 등도 동참하는 범국민 참여 행사로 진행
 - 해양환경공단·어항협회·해군·수협 등의 협조를 받아 부유·침적(수중) 쓰레기 및 섬 등 평상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 수거 병행
 - * 청항선, 어항관리선, 어선 등 동원 가능한 선박,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 (인센티브지원) 수거활동 우수 지자체 및 업·단체를 선정하고 포상 등을 통해 활동 격려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홍보계획) 행사기간 전후로 TV, 라디오, 케이블, 신문 등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SNS, 정부·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 정부,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 공동 홍보를 통한 효과 극대화

□ 수거계획

- (해안가쓰레기)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마을주민, 일반국민, 해양수산관련 업·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거활동 전개
 -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수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 수거 추진
 - 항만공사, 지방청 등에서는 소속 직원, 부두운영사, 인근상인·주민 등과 협력하여 관할 항·포구 주변 해양쓰레기 수거
 - 해운조합 주관으로 여객선사와 주민, 관광객 참여 등을 통해 여객선터미널, 도서지역 선착장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
 - 군 작전지역, 해안가 민간기업 사유지 등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하도록 유도
- (부유쓰레기) 해양환경공단(청항선), 한국어촌어항협회(어항관리선), 지방청(순찰선) 등 보유선박을 활용하여 항만 및 주요 항로의 쓰레기 수거
 - 수협(어선), 해군 및 해경 선박 등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 지원
- (침적쓰레기) 공단 및 협회에서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사업대상지를 우선 수거·처리하되, 접근 및 수거가 용이한 지역은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수거 병행
 - * 공단, 협회, 군·해경·수산자원관리공단 잠수인력, 수협 및 잠수관련 유관기관 등
- (하천·하구쓰레기) 환경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수거주간에 맞춰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 후속계획

-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동참 유도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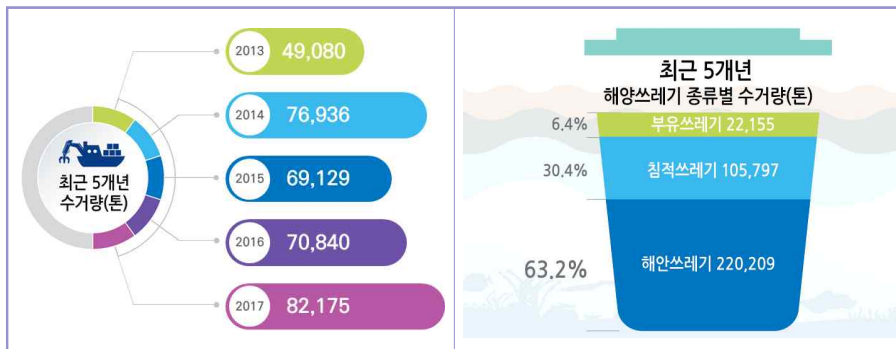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 해양쓰레기 종류별 수거량

(단위: 톤)

종류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유쓰레기	4,213	4,454	4,330	4,697	4,460
침적쓰레기	16,384	19,353	16,252	24,146	29,662
해안쓰레기	28,483	53,129	48,547	41,997	48,053
총 합계	49,080	76,936	69,129	70,840	82,175

□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종류별) 수거량



□ 기관별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강원	1,081	1,980	3,145	1,930	2,401
경기	278	1,714	2,353	1,250	1,033
경남	14,712	9,291	9,154	10,072	15,068
경북	1,221	2,734	1,251	3,310	4,098
부산	1,000	6,963	4,079	2,952	3,163
울산	1,188	1,395	1,232	1,785	1,151
인천	3,086	3,684	1,997	1,009	2,557
전남	7,959	17,344	15,735	21,589	19,657
전북	804	2,700	1,840	2,015	2,353
제주	606	8,933	13,283	5,403	10,714
충남	5,080	7,350	5,541	9,379	10,316
해양수산부*	12,065	12,848	9,519	10,146	9,664
합 계	49,080	76,936	69,129	70,840	82,175